

<첨부2>

2008년 이후 제기된 전략적 봉쇄 소송(국민입막음 소송)의 사례

이명박근혜정권은 자신에 비판적 여론을 봉쇄하기 위해 소송으로 대응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위축효과이다. 이처럼 시민의 공적 발언 및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국민입막음 소송을 ‘전략적 봉쇄소송’(SLAPP :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라고 부른다. 승소 가능성이나 승소의 이익이 크지 않음에도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어 자유로운 집회나 정부 비판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실제로 국가는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는 극히 일부만 인용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개별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검찰과 경찰을 자신들의 비판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온 것을 넘어, 공직자 및 정부에 대한 비판 차단을 위해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특징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공직자 개인 또는 국가기관이 직접 고소하지 않고 보수단체 등 제3자의 고발에 의하거나 수사기관이 직접 나서 선제적으로 수사하고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기소할 경우 비판여론과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고도 국민의 비판을 차단할 수 있었다.

박근혜정권 청와대의 김기춘비서실장은 “비판언론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며 “언론중재위 제소, 고소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상응하는 불이익이 가도록 철저히 대응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언론중재 제소 및 고소 고발을 언론통제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

이명박정권 출범이후 2014년 10월까지 제기된 주요 입막음소송은 39건에 달했다. 이중 30건이 이명박정권 기간동안 제기됐으며 2013년 2월 박근혜정권 출범이후 1년8개월여 동안 9건이 새롭게 제기됐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집계한 사례만 그렇다.

이명박정권 기간동안 있었던 ‘국민입막음 소송’ 30건 중 형사사건은 24건, 민사소송은 6건이었다. 24건의 형사사건 중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경우는 2건에 불과했다.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건이 10건,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3건이었다. 7건은 고소인이 스스로 고소를 취소했다. 6건의 민사소송 중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을 비판한 시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은 1건도 없었다.

대부분 진보성향 언론이 소송대상이었다. 이명박정권은 광우병 위험을 다룬 MBC ‘PD 수첩’ 제작진에 수갑을 채우고 한겨레에 정정보도 및 3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춧불 배후는 주사파 친북세력”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 오마이뉴스를 상대로는 정정보도 및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이명박정권 당시 검사 10명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면 형량을 줄여주겠다’는 BBK ‘김경준 메모’를 폭로했던 시사인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박근혜정권 출범후 제기된 10건의 입막음소송 중 형사사건은 6건, 민사사건은 4건이었다. 형사사건 중 1건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민사사건 1건은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피해 주장이 기각됐다.

2008년 이후 제기된 국민입막음 소송 40건 현황

(고소, 소 제기 일자 순서)

사건 연도	사건명	주제	상세내용	비고
2008	최재경 부장검사 등 vs. 주진우 기자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	BBK사건 수사 축소 의혹	2007년 대선 후보 이명박의 BBK 의혹과 관련 “검찰이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형량을 줄여주겠다고 김씨를 회유 혹은 협박했다”고 보도한 시사인과 담당 기자에 대해 최재경 전 서울중앙지검특수1부장 등 BBK수사팀 10명이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손 배 배 상 책 임 없음
	농림부 vs. 조능희피디 등 명예훼손 고소	광우병 쇠고기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 수첩’ 제작진에 대해 농림부가 검찰에 수사의뢰’ 그후 정운천 전 농림부장관 등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무 죄 확정
	국무총리실 vs. 김종익 명예훼손 수사의뢰	대통령 풍자 동영상	블로그에 대통령 패러디 동영상을 게시한 전 KB한마음 대표 김종익씨를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불기소
	서울시 vs. 전공노 김경용 지부장 등 명예훼손 고소	서울시 현장 시정지원단 제도 운영 관련	전공노 서울시지부, 민주공무원노조 서울시지부가 “서울시 현장지원단 소속 직원들이 무더위에 강행된 국토순례로 입원했고, 농장봉사 때 물도 없이 혹독한 노역을 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 서울시가 전공노 김경용 지부장 등 노조간부 2명을 2008년 10월 명예훼손으로 고소	벌 금 형 (150만원)
2009	이동관 청와대대변인 vs. 경향신문 기자 명예훼손 고소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 루머	경향신문이 2009년 4월 당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 가지 않은 배경을 다루면서 한나라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대변인이 강남 룸살롱에서 고가의 양주를 마시고 종업원들과 시비가 붙었다는 루머가 돌고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이 전 대변인이 경향신문 편집국장, 정치부장, 기사작성 기사 3명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	고 소 취 소
	이동관 청와대대변인 vs. 경향신문기자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 루	위와 동일한 사건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기	소 취하

손해배상청구소 송	머		
국세청 vs. 김동일 명예훼손 고소	노무현 서거 와 국세청 세무조사	참모총장 등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2009년 5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태광실업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이것이 도화선으로 작용해 전직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졌다'는 내용 등 한상률 전 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올린 김동일나주세무서 직원을 국세청이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	무 죄 확정
국정원 vs. 박원순 손해배상청구소 송	국정원 민간 사찰과 간섭	2009년 6월10일 위클리경향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는 기업임원들까지 전부조사해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통에 많은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겨운 상태"라며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곳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명백한 민간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국정원의 민간인사찰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전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해 국정원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손해배상책임 없음
오세훈 서울시장 등 vs. 지하상가 대표 명예훼손 고소	서울시 특혜 의혹 주장 광고	2008년 4월 서울시가 지하도상가 임대차 계약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려하자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특정기업의 특혜의혹을 주장하며 16차례에 걸쳐 반대집회를 열고 일간지에 비난 광고를 게재하자 서울시와 오세훈시장이 상가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무 죄 확정
오세훈 서울시장 등 vs. 지하상가 대표 손해배상청구소 송	서울시 특혜 의혹 주장 광고	위와 동일한 사안 관련 6,000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소 취하
경찰 vs. 이계덕 명예훼손 고소	경찰비판하는 노래(신노병가)	이계덕씨가 경찰을 비판하는 노래 '신노병가'를 발매한 것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전경대장이 명예훼손으로 2009년 8월 고소	불기소
이동관 청와대홍보수석 vs. 홍성태 명예훼손 고소	고위공직자 병역면제 의혹 제기	홍성태 상지대학교수가 칼럼에 이명박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병역면제 의혹을 제기하는 표를 게재하였으나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 등 일부 고위 공직자의 병역면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	고소 취소

			인되어 게재 5시간만에 원자료를 삭제하고 이수석에게 사과의 뜻을 밝힘. 그러나 이동관수석은 고의성이 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2010	유인촌 문화부장관 vs. 네티즌 명예훼손 고소	유장관 풍자 동영상	피겨스케이터 김연아선수가 유인촌장관과 만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중 김선수가 장관을 회피하는 듯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편집한 이른바 '회피연아' 동영상을 게시한 네티즌 8명에 대해 유인촌 전 문화부장관이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소 취소
	이동관 청와대 수석 vs. 경북일보 기자 명예훼손 고소	대구·경북 지역민들 폄하했다는 경북일보 보도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경북일보가 '이수석이 대구·경북민들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2010년 3월 경북일보 간부와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고소 취소
	이동관 청와대 수석 vs. 경북일보 기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대구·경북 지역민들 폄하했다는 경북일보 보도	같은 사건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소 취하
	이동관 청와대수석 vs. 명진스님 명예훼손 고소	청와대의 봉은사 운영 간섭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영국 조계종 문화사업단 대외협력위원의 '봉은사 주지 직영 외압설' 관련 기자회견을 막으려 했다고 주장한 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을 경찰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2010년 5월 고소	고소 취소
	이동관 청와대수석 vs. 김영국 명예훼손 고소	청와대의 봉은사 운영 간섭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봉은사 외압주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한 김영국 조계종 문화사업단 대외협력위원을 2010년 5월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소 취소
	김태영 국방장관 vs. 박선원 명예훼손 고소	천안함 진실 공방	2010년 5월2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하면서 "한국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자료, 이것은 미국이 다 갖고있다"며 정부가 천안함침몰 원인에 대해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노무현정부 당시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박선원 미국브루킹스연구소 초빙	불기소

			연구원을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김태영 국방장관 등 vs. 신상철 명예훼손 고소	천안함 진실 공방	천안함침몰 원인에 대해 “정부와 군당국이 천안함사고원인을 은폐·조작하고 있으며, 실제 사고원인은 좌초 및 충돌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해온 신상철 전 천안함민·군합동조사단위원을 김태영 국방부장관, 김성찬해군참모총장 등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합동참모본부 대령 7명 vs 이정희 명예훼손 고소	천안함 진실 공방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국방부가 함수-함미 분리를 담은 TOD 동영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합동참모부 산하 대령 등 관계자들이 동영상을 봤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당사자로 지목된 합참 대령 7명이 2010년 5월 이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불기소
	국정원 vs. 이석현 명예훼손 고소	국정원 민간인사찰 관련	이석현 민주당의원이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가정보원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사찰하는 팀이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이 이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불기소
2011	김종훈 전통상교 섭본부장 vs. 정은주 기자 명예훼손 고소	쌀개방 추가 협상 의혹	내부고발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국무부의 비밀외교전문을 인용해 ‘김종훈, 쌀개방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고 보도한 한겨레와 기자 3명에 대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고소	고 소 취 소
	김종훈 전통상교 섭본부장 vs. 정은주기자 손해 배상청구소송	쌀개방 추가 협상 의혹	위와 동일한 사안 관련 3억원의 손해 배상청구소송 제기	손 해 배 상 책 임 없 음 (2 심 중 항 소 취 하)
2012	국정원 vs 이석현 명예훼손 고발	‘원세훈 국정원장 열대 과일 반입하다 세관 적발’ 발언	2012년 1월 이석현 민주당의원이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이 유럽과 베트남에 다녀오면서 과일 세박스를 사오다 세관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이 이 전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	불기소
	군검찰 vs. 이모 대위 대통령상관모욕	대통령 비난 트위터	2011년 12월경 퇴근후 자신의 트위터에 “가자, 이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 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라는 글 등	검 찰 기 소 -유 죄 확 정 (징

	죄 기소		13차례에 걸쳐 이명박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현역 군인이 상관모욕죄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	역 6 월 , 집 행 유 예1년)
	최윤희 해군참모총장 vs. 김지운 모욕죄 고소	제주해군기지 풍자 '해적기지' 발언	2012년 3월 자신의 트위터에 "제주해적기지반대합니다. 강정마을,구름비바위 지켜냅시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린 김지운 통합진보당청년비례대표후보를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이 "해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고소	불기소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등 vs. 박창근 교수 명예훼손 고소	4대강 사업 비판	2012년 6월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낙동강특위 활동을 보고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창녕 함안보의 콘크리트 연직이음부에서 부등침하로 단차가 발생하자 수공이 철판을 덧씌워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한 박창근 관동대 교수에 대해 수자원공사 등이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	불기소
	국정원 vs. 나꼼수 명예훼손 고소	2012년 대선관련 '십알단' 폭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꼼수'가 2012년 12월 방송을 통해 "십알단(십자군 알바단) 선거사무실 임대비용을 지원하는 곳이 국정원과 연결돼 있다", "국정원에서 (선거)막판에 박근혜를 도우라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이 나꼼수 멤버들(김어준, 김용민, 주진우)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불기소
	국정원 vs. 서영석 명예훼손 고소	2012년 대선 관련 국정원 댓글알바 폭로	서영석 전 서프라이즈 대표가 2012년 12월 "국정원 댓글 알바 또다른 현장을 현재 급습해 증거를 확보중"이라는 내용의 트윗을 올린 것과 관련해 국정원이 서 전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2013	국정원 vs. 표창원 명예훼손 고소	2012년대선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언론인터뷰, 일간지 기고문 등을 통해 2012년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원은 위기"라면서 "정치관료가 정보와 예산, 인력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국제첩보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 무력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 표창원 전 교수에 대해 국정원 직원명의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불기소
2013	국정원 vs. 민변	서울시공무	탈북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의 변호를	

	변호사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원 간첩사건 의혹제기	말은 민변 장경욱 변호사 등 3명이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수사관들이 회유 및 협박 등으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정원 직원들이 장변호사 등 상대로 6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국정원 vs. 최승호피디 명예훼손 고소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의혹제기	뉴스타파의 최승호피디가 2013년 11월 뉴스타파에서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관련해 국정원 수사관들이 가혹행위를 해 허위자백을 이끌어냈다"고 방송한 데 대해 국정원 수사관 3명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국정원 vs. 최승호피디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의혹제기	위와 같은 건으로 국정원 직원이 최승호피디 등 상대로 1억5,000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	
2014	국정원 vs. 이재명 성남시장 명예훼손 고소	국정원 지방선거 개입의 혹 제기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4년 1월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이 성남시장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사찰한 증거를 포착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정원 직원이 이시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불기소
	해경 vs. 홍가혜 명예 훼손	세월호참사 당시 해경 구조와 관한 의혹 제기	세월호참사 초기 홍가혜 씨가 "해경이 민간잠수사의 구조를 막고 있다"는 방송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긴급체포 및 구속	
	해경 vs. A씨 명예 훼손	세월호참사 당시 해경 구조와 관한 의혹 제기	세월호참사 초기 A씨가 "민간잠수부 투입을 막고 있다"는 대화내용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	
	청와대비서실 및 김기춘 비서실장 등 vs. CBS	박근혜대통령 조문장면 연출 의혹	세월호참사 후 박근혜대통령이 안산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 당시 박 대통령이 유족으로 보이는 한 할머니를 위로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었음. 이 할머니가 유족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CBS는 "청와대측이 할머니를 섭외해 조문장면을 연출했다"고 보도. 청와대와 김기춘비서실장, 박준우정무수석 등	

			은 CBS를 상대로 8,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청와대비서실 및 김기춘 비서실장 등 vs.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 진도체육관 방문 당시 상황에 대한 의혹		세월호참사 직후 박근혜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해 가족을 잃고 홀로 구조된 5세 여아를 위로하는 장면이 보도되었음. 한겨레는 인터넷기사에서 '쇼크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대통령 현장 방문에?'라는 제목으로 아이를 동원해 조문장면을 연출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 제기. 김기춘비서실장 등이 명예훼손으로 8,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박근혜대통령 등 vs. 박지원 명예훼손 등	'만만회'의혹 제기 등		박지원의원이 박근혜대통령의 비선라인으로 이른바 '만만회'를 언급한 것 등과 관련해 보수단체가 고발, 검찰이 기소
박근혜대통령 등 vs. 산케이신문 지국장 등 명예훼손	박근혜대통령의 세월호참사 당일 행적에 관한 의혹 제기		일본의 산케이신문이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을 박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

박근혜정권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못마땅한 신문'을 소송으로 압박했다. 무엇보다 대통령 개인의 캐릭터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유력 중앙일간지의 한 논설위원은 "이명박대통령은 기업인 출신으로 흥정과 거래를 통해 문제를 풀었다면 박근혜대통령은 '내가 잘못된 게 뭐 있느냐'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근혜정권은 2013년 10월 "진영 전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을 신청했다가 청와대 비서실로부터 거절당했다"는 국민일보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일보가 "진영 복지부 장관이 대통령 면담 요청이 목살당하자 사퇴를 결심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다가 취하했다. 국민일보가 자사보도를 뒤집는 보도를 내며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다.

2013년 10월 법무부장관이 '삼성 떡값'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김기춘비서실장이 해당 언론사 뿐 아니라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14년 4월 김기춘비서실장과 이재만총무비서관, 정호성제1부속실장, 안봉근제2부속실장 등 4명은 시사저널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8,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사저널이 "청와대 비서진과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씨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의혹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였다. 청와대는 그해 5월 시사저널과 유사한 내용을 보도한 일요신문을 상대로도 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통령비서실 명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2014년 11월 세계일보의 정윤희문건 보도 이후 후속취재가 이뤄졌다면 최순실 게이트와 탄핵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 박근혜정권은 세계일보에 집요한 보복을 계속했고 세계일보는 취재를 중단하고 특별 취재팀을 해산했다.

보도직후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이 세계일보 사장 편집국장 사회부장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청와대와 세계일보는 전면전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2015년 1월말에는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세계일보 고위 관계자를 만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조한규사장은 “세계일보가 부당하게 청와대의 압력에 굴복하여 대표이사이면서 편집권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던 나를 해고했다”며 세계일보를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9월에는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의 강남땅 의혹을 최초 보도했던 조선일보기자의 스마트폰이 검찰에 의해 압수된 사건이 있었다. 또 다른 조선일보기자는 우병우 민정수석 차량 차적조회를 경찰에 부탁했던 것이 드러나 불구속 입건됐다. “여당의 친박의원이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아니면 도저히 입수할 수 없을 듯한 내용을 폭로”하며 조선일보가 위기에 몰렸다. 조선일보는 방상훈사장의 최측근이었던 송희영 주필이 사퇴할 만큼 거센 검찰수사의 압박 속에 긴장했다.

박근혜정권은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시민의 비판이나 의혹제기를 차단하기 위해 고소 고발을 남발했다. 참여연대가 2015년 9월7일 박근혜정권 전반기(2013년 2월~2015년 8월) 동안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비판과 합리적인 의혹제기를 했던 시민과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입막음소송 실태를 조사해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을 발표했다.

박근혜정권이 임기절반을 넘긴 2015년 8월까지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시민의 비판이나 의혹제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명예훼손 모욕을 이유로 고소, 고발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주요 사례 22건을 다뤘다. 이중 형사사건은 18건, 민사사건은 4건이다. 18건의 형사사건중 현당시까지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수사중인 사건은 6건,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5건, 기소된 사건은 7건이었다. 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된 7건 중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1건이고, 1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2건의 국민입막음 소송중 위에서 거론되지 않은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한국수자원공사 vs.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명예훼손등 고소

염형철사무총장은 태국 물관리사업 방수로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수자원 공사가 최근 수년간 부채가 상당히 증가했고 사업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현지 인터뷰를 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2013년 7월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2015년 4월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됐다.

○ 경찰 vs.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모욕죄 고소

박석운대표는 청계광장 주변 인도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특검도입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던 중 천막설치를 제지하고 물품을 압수하는 등 집회를 방해하는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영장제시를 요구했으나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이를 묵살하자, “경비과장이 어찌 그런 것도 모르냐, 무식하다”고 발언했다. 경비과장은 이를 문제삼아 2014년 4월 (경찰관) 모욕죄로 고소했다.

○ 김기춘 비서실장 vs. 조동주 동아일보기자 명예훼손 고소

1991년 구원파가 관련된 오대양사건 재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기춘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검사교체를 통해 재수사를 방해했다는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의 주장을 동아일보가 기사화했다. 김기춘비서실장은 2014년 5월 이를 작성한 조동주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2015년 1월 고소를 취소했다.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vs 강세준 전 아시아투데이 기자 명예훼손 고소

강세준 전 아시아투데이 기자가 김성태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이 특정단체에 특

해를 줄 소지가 있고 추진배경에 김성태의원과 국토부, 특정단체와의 유착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기사를 작성해 보도했다. 김성태의원은 2014년 8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2015년 5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 김무성 vs. 참여연대, 배제흠 수원대 해직교수 명예훼손 고소

참여연대와 배제흠 전수원대 교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자신의 딸을 수원대 전임교원으로 채용하는 대가로 이인수 수원대총장을 2013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수뢰 후 부정처사로 김무성대표를 고발했다. 김무성대표는 2014년 12월 참여연대 및 배제흠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 박근혜대통령 vs. 박모씨 등 명예훼손

박모씨가 ‘정윤희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제작하고 직접 배포하거나, 전국 각지로 배송했다. 검찰은 2015년 5월 박근혜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박모씨 및 전단지를 배송받아 배포한 변모씨, 신모씨 등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했다.

○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vs. 의정부지역 시민단체 회원 명예훼손 고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린다.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과 2억원이 거론된 홍문종의원에 대해 홍의원 지역구인 의정부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유인물을 배포했다. 홍의원은 2015년 5월 이 시민단체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 경상남도 vs.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 명예훼손 고소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가 강제 폐업된 경남 진주의료원에 음압병실이 있었으므로 폐원시키지 않았다면 메르스환자들을 적절히 입원 치료하여 경남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2015년 6월 진주의료원에 음압병실이 없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단체 대표 등을 고소했다.

○ 박근혜 vs. 박래군 명예훼손

박래군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마약을 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2015년 8월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를 적용해 박래군씨를 기소했다.

*‘이명박근혜정권의 언론통제’(김주언 지음)에서 재인용.